‘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도 집유…“벌금, 죄책 상응 형벌아냐”

이슈판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인사팀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 ·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자신의 개인돈으로 가사 도우미의 월급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고용인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며 “또 가사도우미 문제점을 인식해 곧바로 귀국시켰다며 유리한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다시 다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장녀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불법 고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의 벌금형 구형은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기 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불법 과정을 보고받고 이를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계속 회사를 개입시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집하고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을 위해 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구체적 사정을 알게 되면서 점차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여생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센’ 형량을 선고했다.

‘5만 조합원 목표’ 삼성전자 노조 출범

내일 출범식갖고 18일 전 공장 대상 홍보

상급단체 가입 실질적 활동성 노조 ‘처음’

삼성의 ‘50년 무노조 경영’을 깨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오는 16일 삼성전자 노조 출범식을 열고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동시 선전전을 개시한다.

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삼성전자 제4노조는 16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연 뒤 오는 18일 전(全) 공장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조는 우선적으로 조직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출범 선언 직후 노조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삼성전자 노조 설립총회를 연 뒤 11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에는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합법 노조임을 인정 받았다.

삼성에 양대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69년 창립 이래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합원 수가 10여명 수준인 노조 3개가 만들어졌지만, 이 노조들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활동도 없었다.

반면 제4노조는 전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직종에 상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며, SK하이닉스 · LG디스플레이 노조 등과 함께 산별노조 활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삼성에서도 노조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 산하 노조를 설립하고 지금껏 7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모았다. 이 같은 동력을 또 다른 무노조 기업 대표인 삼성에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에는 기흥과 화성 등지 반도체 부문 종사자 4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노총 측은 정확한 조합원 수와 관련해 함구했다. 설립 초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신상이 파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조 규모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직 확대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노동자 ‘과반’ 확보다. 삼성전자 직원 수는 지난해 10만명을 돌파했다. 설립 극초반인 지금으로서는 최단기간 1만 조합원 달성을 노리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모든 노동조합의 기본 목표는 (기업에 속한 노동자의) 과반 조합원”이라며 “삼성이라 쉽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절반을 넘는 삼성전자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아지도 핵폐기물 퍼포먼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는다”라며 “공론화 중단과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강제수사 79일만에 비공개 출석……수사 차질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시작부터 오후인 현재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정 교수의 주요 혐의에 대한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 사퇴로부터는 정확히 한 달 만에 이날 검찰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이 출석하는 장면은 이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연루된 만큼 그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환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뉴스1

“한국정부, 홍콩 민주화 열망 침묵해선 안돼”

시민사회단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정부가 홍콩과 중국정부의 무차별 폭력 진압과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정부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외침에 침묵해선 안된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와 더불어 홍콩과 중국정부에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 즉각 중단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 설치 △24일 예정된 구의회 선거를 연기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군부독재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침묵하지 않고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총 67개의 단체로 구성된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는 5 · 18기념재단, 광주인권평화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NCCK 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